

# 규격화제도 새 시행방안 입법·예고될 듯

관련단체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해온 한약 규격화 제도의 새 시행방안이 빠르면 9월 중순을 전후해 입법·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시행방안의 골자는 △규격품을 필수규격과 임의규격으로 구분 △단순절단 가공(업)의 신설 △제조업 품목의 범위 설정 △규격 한약재의 유통일원화 폐지 △규격품목 확대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재 규격화 유통관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시행방안에 대한 8개 관련단체들의 입장을 최종 수렴할 방침으로 있다.

복지부는 최근 관련단체들에게 제시한 새 시행방안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새 시행방안의 골자중 관련단체간에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신설된 임의규격의 허용범위 △단순절단 가공(업)의 정의와 범위 △규격 한약재의 유통일원화 폐지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임의규격 품목에 △가격 △중량 △등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할 방침이지만 필수규격과는 다르게 「자율적인 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약재 제조업체들은 『규격화 제도의 성공요건은 비규격품의 철저한 유통금지에 있다』고 밝히고 『임의규격은 비규격품의 간접 유통을 허용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 「단순절단 가공(업)」의 신설방안에 대해서도 제조업자들은 규격화 제도를 원점으로 회귀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는 한편 생약협회와 농민들은 기존의 자가규격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규격한약재의 유통일원화 문제는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제조업체와 도매업소 등에서 이해득실이 미묘하게 교차함에 따라 뚜렷한 절충점 없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규격품 제조업 품목의 범위를 △위조·변조가 우려되는 품목 △중독 우려가 있는 품목 △변질·변패 우려가 있는 품목 △기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품목 등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해설/단순절단 가공(업)이란?

한약재 규격화 제도 시행과정에서 처음부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문제가 바로 농민들이 생산한 「단순가공품」을 규격화 제도의 걸림돌임에도 과연 유통시켜야 하는 부분이었다.

정부는 고민끝에 농민들의 판로를 보장해 주기로 하고 이른바 「자가규격」을 경과규정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동안 유통업자들의 「자가규격」으로 확대·관행화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따라서 이번에 이 자가규격이 철폐되는 대신 단순절단가공(업)이 새로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단순절단가공(업)은 결국 기존의 「자가규격」규정과 비슷한 의미로 보면 무리가 없다.

유통업자들에게는 또 「임의규격」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해 「자가규격」철폐에 따른 문제를 배려하려는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업」자를 붙이느냐 떼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다.

「업」자를 붙이게 되면 복지부의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특정시설(공장)을 지녀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단순절단가공(업)」은 「임의규격」규정과 함께 그 제한범위를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한약재 규격화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규정이 되게 됐다.